

전환기의 韓·美 방산협력

- 柳俊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지난 '87년이래 한국과 미국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은 한·미 방산회의와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등의 모임을 통하여 양국 방산협력의 현안문제를 깊이 있게 토의하여 왔습니다.

주로 거론되었던 이슈(issue)를 살펴보면 오프셋(off-set), 공동연구개발, 지적소유권 보호, 기술이전, 방산품 상호구매 확대등 다양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정부 및 방산업체간의 노력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이라 할수 있는 기술이전 및 상호구매 확대등은 상대적으로 진전이 미흡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방위산업이 현재와 같은 궤도에 오르게 된 이면에는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바탕으로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국의 무기체계등이 미국과 가장 유사함에 비추어 한국방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도 미국의 협조가 없이는 해소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한국의 방산시장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에 와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협조를 잘 하지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기술자료묶음(TDP) 제공도 70년대초 한국의 방산육성 초창기에 이루어졌을뿐, 근래에 와서는 최신기술의 이전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기술이전

결정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근 세계적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신데탕트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총리가 대좌하는 등 표면적인 변화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실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사 향후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대치의 위협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안보면에서 추호의 빈틈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중이라고 알려져 있을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고서도 핵안전협정의 서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뿐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데탕트 시대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가 될수 있다는 것은 월남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라는 바는 북한보다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억지할수 있는 정도의 균형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차만 하더라도 북한은 오래전부터 자체기술로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는 완전국산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국에서는 심분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이전문제에서 미국은



보다 신축성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방산시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기시장은 일부 방산선진국에 의한 독점공급형태로 이루어져 방산협력의 선택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생산국이 증가하면서 다원화된 세계 정치, 경제, 사회현상과 결부되어 경쟁공급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방산협력의 선택폭도 다양해짐에 따라 미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산선진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국가는 모종의 장비를 판매한후 그에 관련되는 기술을 100% 이전해주는 것은 물론 오프셋도 한국측 규정대로 응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크게 환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이미 생산 중지된 장비를 한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제작하여, 해외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이마저 안된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근래에 합의본 미국장비의 생산에 있어서도 한국내에서 한국의 소요량만 제작하도록 하고, 제3국에는 판매할수가 없다고 하니 이러한 사업을 누가 앞장서 추진하겠습니까?

이러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미국형 재래식무기의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들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끝나지 않고, 세계무기시장에서 미국형 무기공급의 감소를 초래함은 물론 기술이전등의 정책이 까다롭지 않은 다른 국가로 구매선을 전환하게 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전같이 미국의 무상군원(無償軍援)이나 차관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인 국가예산으로 구매하는 입장에서 그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용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편 상호구매문제에서도 미측의 더 많은 관심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미국의 군수조달은 국방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물자와 용역을 구매하는 국방부조달과 미국내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민간조달로 나눌수 있는데, 국내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조달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조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에 대해서는 美 국방부조달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규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내 구매법(Buy American Act)과 국제수지 개선계획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이 법규들에는 국방부 소요물자 및 용역에 대해 국내조달원칙 또는 우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법의 적용에서 면제되지 않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은 응찰가 산정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게되어 사실상 경쟁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조달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유자격국가(Qualifying Country)라 하여, 이들 법규의 제약조건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방산업계가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측에서 제안한 상호구매 양해각서 체결이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소련제 무기를 구매하던 이집트같은 국가도 美 국방부조달의 제약조건을 면제해주는 유자격국가로 분류하여 미국방부조달 참여를 허용하면서, 오랜 혈맹이자 미국과 안보이익을 같이하는 한국은 왜 이러한 배려를 받을수 없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측에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호구매에 있어서도 당장 한국을 NATO국가 수준과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며, 호혜적인 입장에서 상호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와 접촉한 미국 방산업체 대표들은 대체로 한국과 상호구매 양해각서의 체결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

을 표명하면서, 양국 업계가 합심하여 이 일이 완성되도록 과정을 발전시키고 시행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방산업체 대표들은 우선 한국 업체가 미국의 파트너를 찾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양국에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동생산시 51%/49% 합작방식을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하여 각 업체가 당사국에서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면, 對美판매에 있어서 미국내법의 규제를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최근 양국 업체간의 만남을 통해 느낀 것은 미국업체가 한국업체를 상호도움을 줄수 있는 대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선진 개발도상국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지속적으로 우세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9년 태평양지역과의 방산협력에 관해 美 국방부에 제출된 미 국방과학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태평양지역국가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건설적인 동반자(Constructive Partner)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의 보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기술이전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일전 어떤 미국 防産 주요인사는 한·미 관계가 공동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이러한 관계는 자유세

계 방어를 실현시키는 힘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양국간의 방산협력에 대한 미국의 또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방산협력시 단기적으로는 미국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방산 선진국가들이 있지만, 부속품의 후속공급이나 운용요원의 양성, 정비의 보장등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조건이 월등히 양호하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번영이 있기까지 미국의 막대한 지원등을 감안할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미국과 손잡고 방산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전통적인 한·미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유사시 미국의 안보지원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미국으로서도 현재의 방산시장 여건에서 국제적인 방산협력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판단하여 작은 것을 더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 방산업체간 활발한 대화와 접촉을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이 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